광주 수영동호인들 훈련 공간 부족

동구국민체육센터 ·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휴관

인프라 부족 · 국제규격 시설 대회준비와 맞물려 훈련장 부족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열리는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잔치인 마스터즈대회 경기에 출전하는 광주 지역 수영동호인들이 훈련할 공간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개최도시지만 정작 지역 수영동호인들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데다 하필 대회 개막을 눈앞에 두고 공영수영장들이 개·보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산수동 옛 국민체육센터는 예산 18억여 원을 들여 수영장·헬스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현재 3층 규모인 시설을 4층 규모로 증축, 배드민턴·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한다.

지난 2011년 건립된 동구국민체육센터는 건립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수영장 등을 구축하는데 그쳤고 시설이 10년 가까이 돼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 개·보수 및 증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동구국민체육센터는 공사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전 시설을 휴관한다.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도 다음달 28일부터 9월15일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 상 이유로 수영장 이용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

관리주체인 광주시교육청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역 동호인들이 모임·연습시설로 사용했던 북구 운암동 체육고 수영장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세계수영대회 출전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이면서 동호인과 일반인 이용이 제한된다.

광주지역 수영장은 공공기관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합쳐 모두 1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제대회 규격인 50m 레인을 갖춘 시설은 광주 지역에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염주체육관수영장, 체육고수영장 등 3곳에 불과하다. 그밖의 수영장은 개인사업장이거나 위탁받은 곳으로 선수 전용 레인이 아닌 25m 레인을 갖춘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동호인들은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대회 직전 개·보수 공사와 주요 시설 대회준비 돌입으로 훈련 장소가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이번 마스터즈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동호인은 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경주(47) 빛고을 수영클럽 회장은 "통상 1개 레인 당 동시에 10명 안팎이 훈련하지만,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평균적으로 20명이 1개 레인을 이용해야돼 불편함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수영장은 기존 회원만 이용이 가능한 곳이 많고, 상당수의 동호인들은 이용료 부담과 이동 상 불편을 감수하면서 훈련 프로그램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명색이 세계수영대회 개최도시지만 수영 인프라는 열악하고 행정당국은 지역 동호인들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수영동호회 회원 김모(34) 씨는 "수영장 보수 계획이 미리 잡혀있다고는 하지만, 개최도시로서 대회 직전 공영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대회 흥행과 수영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당국이 세심히 신경썼더라면 없었을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주제로 오는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31일간 진행된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서은홍 기자

사냥에 성공한 쇠백로 23일 오전 경남 통영시 한 하천에서 쇠백로 한 마리가 수로에 앉아 물길을 따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사냥 하고 있다.

전국 동물보호단체 "담양시장 동물 불법매매 중단해야"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담양의 동물 불법시장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전국 24개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오후 담양군 담양읍 5일시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담양 동물 불법시장의 동물학대 행위에 반대하며 시장 내 불법 혐오시설이 방치되고 묵인되는 현실에 공식 항의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담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천년생태도시지만 담양 5일장에는 호남에서 가장 큰 동물불법시장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다 죽어가는 새끼들은 행인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면서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 시장에는 대낮 대로변에서 불법영업과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양군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생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불법시장을 감싸고 있는 자치단체의 직무유기와 무허가 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분노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이날 집회에서 ▲동물불법 매매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개 식육식당·사육번식장·매매시장 폐쇄 추진 계획 수립 ▲전문가·동물보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호남 최대의 담양 동물불법시장 즉각 철폐', '동물불법 판매 금지하라', '천년 담양의 부끄러운 동물학대' 등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2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또 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동물시장 폐쇄의 뜻을 담아 청원서 서명운동도 펼쳤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동물시장 폐쇄 때까지 거리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민주노총, 김명환 구속 강력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대해 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구속을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고 보고 '하투(夏鬪)'에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 건물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6~7월 세부 총력투쟁계획 ▲총력투쟁 전국 확대 방안과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방안 ▲노정관계 전면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또 조직의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전면·대대적 투쟁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전반적인 조직 기조 자체를 대정부 투쟁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지도위원 12명의 긴급 모임이 이뤄졌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 위원장 구속 사태는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며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닌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노동자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의 정부 기조가 노동에 대한 탄압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 김 위원장 구속은 그 상징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앞서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구속자 석방 노동탄압 중단'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집회에서는 "위원장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이 정부 역시 재벌 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분쇄하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타박하는 형수 살해한 시동생 감형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6년 선고…법원 "양형 고려"

친형과 말다툼 중에 끼어들어 자신을 타박했다며 형수를 살해한 시동생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수를 살해한 사건이고 피해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면서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A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6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저녁 경기 여주에 있는 친형 집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끼어들어 타박하는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친형에게 수차례 도움을 구하던 A씨는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친형이 거절하자 수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친형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친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A씨는 옆에 있던 형수가 "형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